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38호 2015년 7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작 라00076 발행일 2015년 7월 발행(38호)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두사
연구원소식
최신건설정보
발간물안내





'국민을 위해 4만여 전문건설사가 나서야 할 때'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가족 여러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정 중 오 인사 올립니다.

무더운 여름! 많은 분이 더위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전문건설인은 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여름 무더위보다 우리 가슴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실 전문건설인의 소규모복합공사 도급 참여는 이미 2011년 11월부터 허용되었지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발주 공사 자료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3년 3억원 미만 공사 중 소규모 복합공사로 발주된 공사는 총 357건으로 전체 520,290건의 0.07%에 불과했고, 금액도 총 262,8억원으로 전체 142,097억원의 0.18% 불과했습니다.

애초 전문건설인의 소규모복합공사 도급 참여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급단계 축소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로 공사품질 향상 및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혈세 낭용 방지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원 이하라는 황당한 금액 범위를 비롯한 과도한 제약조건에 묶여 1%의 실효성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소규모복합공사 도급 참여와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3억원으로 규정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가족 여러분!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부대입찰 제도처럼 일정규모의 소규모 복합공사는 반드시 전문공사로 발주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규모복합공사 도급 참여 규모 확대에 따라 우리 전문건설인 가족의 이익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반드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사품질 향상 및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혈세 낭용 방지를 위해 4만여 전문건설사가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을 위해 나설 때, 기꺼이 국민도 저희에게 힘을 실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그동안 건설산업의 선진화,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제고, 비효율적 관행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오셨듯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국민들께 알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가족 여러분! 우리 건설업계가 당면한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SOC사업 감소와 세계경제 불황이 겹쳐 유례없는 건설불경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적정한 공사원가를 반영 받지 못해 공사를 수주하고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전문건설인이 한마음·한뜻으로 지금의 어려운 건설환경을 헤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헤려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업계의 싱크탱크로서 각종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한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길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지수위원회의 참석

-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은 지난 7월 7일, 동반성장위원회 지수위원회에 참석하여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촉진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발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연구용역 계약 체결

- 지난 7월 13일, 우리 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동 보고서는 매년 기업경영, 공사계약, 자금조달 등 여러 측면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영과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동 연구용역을 수행해왔으며 금년에는 이보라 연구위원과 정대운 연구원이 맡아 오는 10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

- 지난 7월 14일,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이 부산·울산중소기업청에서 열린 '민관합동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간담회 진행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 정부관계자 및 중소기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동 간담회는 범정부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현장의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수립 및 법집행에 반영할 목적으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조·건설·유통·정보통신 등 여러 업종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중소·중견 건설업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 국토부는 7월 24일까지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을 모집한다. 사업내용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타당성조사비, 현지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및 효율체계 전면 개편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신뢰 및 지원기능 강화와 더불어 보증기관으로서의 위험관리를 위해 보증한도 및 수수료를 체계를 아래와 같이 전면 개편하였다.

주요 개편내용

- 보증배수 : 기존 10~33배 → 11~35배로 상향
- 보증한도 산출등급 14개 등급으로 세분, 보증한도 산정 보증위험가중치 인하
- 보증수수료율 : 기본요율과 운용요율로 이원화, 개별업종별로 수수료율 세분 적용
- 담보할인 20% → 70% 대폭 확대
- 선급금 공동관리 할인 50% → 70% 확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 행정자치부에서는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수의계약 결격기간 완화, 물품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술료 협약기준 마련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15년 7월 20일 부터 적용)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결격사유 기간 단축 : 6개월 → 3개월
- * (결격사유)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등
- 특수한 성능의 납품능력으로 제한시 기술료 지급기준 마련
- :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 대가지급 마찰 최소화를 위해 기술지원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토록 의무화



조달청,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개정

- 조달청에서는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기준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15년 7월 21일 이후 수의계약 요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신기술·특허공법의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술 사용료의 지급에 의한 기술 지원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워 기술 보유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로 구체화 되었고, 신기술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신기술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60%에서 70%이상으로 상향하여 경쟁입찰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2015.07.20. 기준)

-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이 상향됨에 따라 종전의 22개사에서 21개사로 축소되었다.

* 제외업체 : 대우조선해양(주)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업체 명단 >

(2015. 7. 20 현재)

| 연번 | 상 호 | 대표자 | 지역 | 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 | | | 비고 |
|----|------------|-----|----|-------------|-----|-------|----|
| | | | | 한기평 | 한신평 | NICE평 | |
| 1 | 대림산업(주) | 김동수 | 서울 | A+ | A+ | A+ | |
| 2 | (주)대우건설 | 박영식 | 서울 | A | A | A | |
| 3 | 두산중공업(주) | 한기선 | 경남 | A | A | A | |
| 4 | 롯데건설(주) | 김치현 | 서울 | A | A | A | |
| 5 | 삼성물산(주) | 최치훈 | 서울 | AA- | AA- | AA- | |
| 6 | 제일모직(주) | 김봉영 | 서울 | AA+ | - | AA+ | |
| 7 | 삼성엔지니어링(주) | 박종흠 | 서울 | - | A+ | A | |
| 8 | 삼성중공업(주) | 박대영 | 서울 | AA- | - | AA- | |
| 9 | (주)서브윈 | 박규석 | 서울 | AA- | AA- | - | |
| 10 | 에스케이건설(주) | 조기행 | 서울 | A | A | A | |
| 11 | (주)엔에이치개발 | 김성훈 | 서울 | A | A- | A | |
| 12 | 지에스건설(주) | 임병용 | 서울 | A | A | A | |
| 13 | (주)포스코건설 | 황태현 | 경북 | A+ | A+ | A+ | |
| 14 | (주)포스코켄텍 | 조봉래 | 경북 | - | AA- | AA- | |
| 15 | 한국전력기술(주) | 박구원 | 경기 | AA | - | AA | |
| 16 | 현대건설(주) | 정수현 | 서울 | AA- | AA- | AA- | |
| 17 | 현대로템(주) | 한규환 | 경남 | A+ | A+ | A+ | |
| 18 | 현대산업개발(주) | 정몽규 | 서울 | A | A | A | |
| 19 | 현대엔지니어링(주) | 김위철 | 서울 | AA- | AA- | - | |
| 20 | 현대중공업(주) | 최길선 | 울산 | AA- | AA- | AA- | |
| 21 | (주)효성 | 이상운 | 서울 | - | A | A | |

* 공란(-)은 해당기관에서 회사채평가 미실시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17호 발간

-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17호가 발간되었다. 건설정책저널은 건설업체 경영자, 정부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들에게 건설산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경영전략 및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분기별(계간)로 발간하고 있다.
- 동 간행물은 건설관련 이슈 등을 담은 논단과 함께 전문건설업 경기동향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BSI)'와 본원의 주요 소식, 전문건설업 관련 정책/법령 개정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다.

〈 건설정책저널 통권 17호 내용 〉



| | |
|------|-------------------------------|
| 논 단 | 건설분야 강소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및 육성 방향 |
| | 사용자를 위한 장수명 공동주택 유지관리 연구 |
| |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방안의 필요성 |
| | 해외건설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방안 |
| | 남·북한 건설법제의 비교 및 시사점 |
| 연구리뷰 |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
| 건설동향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BSI) |
| | 원내소식 |
| | 업계동향 |

2015년도 1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발간



- 1/4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이 발간되었다. 동 간행물은 전문건설업계의 실태와 기업경영상의 애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 동 조사는 분기별로 연 4회 실시되며, 세부적으로는 건설경기전망,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공사수주, 공사대금 수령, 하도급 불공정거래, 기술·기능인력 수급, 자재·장비 수급, 불공정거래 피해사례를 포함한 총 8개 항목, 41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현황과 경영환경변화 등을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조사항목도 추가·보완된다.